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음 5월 12일) 제4001호

대표전화 (063)288-9700

▶▶ 매일 INDEX

5면

시민 후원으로 이어지는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

9면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8월 지급 만전

금융특화도시 청사진 현실화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속도… 국민연금 중심으로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특화도시 조성의 청사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특화한 금융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하반기 예정된 현장실사와 평가에 대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금융중심지 지정 대상지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원 3.59㎢ 규모로, 금융업무와 주거·지원시설이 어우러진 금융특화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8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평가 용역을 거쳐 연말께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논리를 보강하고 금융위원회와 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 인프라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집적이 가속화되고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전북 거점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제금융센터 건립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금융중심지 지정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 투자 위축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금융산업 생태계가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30층 규모의 랜드마크 금융타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민연금공단이다. 세계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 핀테크 기업 등을 집적화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서울이나 부산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산업의 기능 분담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이 종합금융, 부산이 해양·파생금융을 담당한다면 전북은 자산운용과 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특화해 국가 금융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정책 협력을 확대하며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도 추진된다. 도민과 출향 인사, 경제계와 학계, 금융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전북의 강한 의지를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금융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성장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약 1만1,700명의 고용 창출과 최대 2조원 규모의 지역내 총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에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청년 유출을 막고 인재와 자본이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적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는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찾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사진 왼쪽)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25일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호남권 반도체 투자 '전북 포함 분산 배치'로"

도지사직 인수위, 전남광주 대규모 투자 논의 관련 우려 제기

이 대통령이 밝힌 '3중 소외' 언급… "새만금, 최적 입지 갖춰"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가 최근 제기된 광주·전남권 반도체 대규모 투자 논의와 관련해 전북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재명 정부에 호남권 내 반도체 산업의 분산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수위원회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북의 '3중 소외'를 언급하며 특단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반도체 투자 계획에서도 전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민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만약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광주·전남에 집중된다면 호남권 내부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수위원회는 특히 새만금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기반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비롯해 충분한 산업용수 확보 가능성, 대규모 산업부지,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d) 물류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9조원 규모 투자와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반도체 투자 계획 역시 균형발전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우선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전북을 포함한 분산 배치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미래 산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도민이 다시는 '3중 소외'의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는 "반도체 공장 투자가 전북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집중될 경우 도민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4중 소외(기존 3중 소외 + 정부예산 배분으로부터의 소외)'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며 "도민들의 절망과 상실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균형 성장과 지방주도 성장의 약속을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수위원회는 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계획에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분산 배치가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이 이번 투자 계획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비 오기 전 위험지역 파악… 'AI 침수예측' 재난대응체계 구축

전북도-KISTI,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 성과교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도시 침수 대응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도는 25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KISTI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 침수 대응 기술 실증(PoC) 결과 공유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기술의 정책·행정 활용 가능성 △지자체 확산 및 기관 간 후속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들은 데이터 기반 침수 예측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비가 내리기 전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도시침수 대응의 디지털 전환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협력은 행정기관과 연구 기관이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안전행정망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하반기에는 강우 시 사전에 마련한 침수 시나리오로 위험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대비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KISTI, 전북TP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 대응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논란' 이상직 전 의원, 대법서 무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창업주 이상직(63) 전 국회의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항공사 운영 편의를 청탁과 자녀의 채용 기회를 제공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와 최종구(62) 전 대표의 일부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최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뉴시스